전주 도시공원 관리 노인 일자리 연계

시, 노인 공익활동사업 일환으로 75개 공원에 250여명 어르신 배치 수목 · 환경 관리 추진

전주시가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로 행복녹색도시를 만들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제공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는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취업지원센터와 함께 노인 공익활동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수목 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족한 인력 탓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도시공원의 수목과 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도심 확장으로 최근 몇년 사이에 전주지역 내 도시공원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공원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산책로와 의자, 정자 등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 시설 위주의 보수 관리에 그치며, 공원청소와 수목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역 내 75개 공원에 250여명의 어르신을 배치해 매월 10회 정도에 걸쳐 쓰레기 줍기와 보도주변 관목사이, 담장외벽, 놀이터 등의 잡초 제거로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고 편의시설, 화장실,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 공원시설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수목전지작업이 가능한 팀을 별도로 구성해 전북환경관리지도사총연합회와 연계 전문조경분야 기술지원(교육)을 받아 공원수목관리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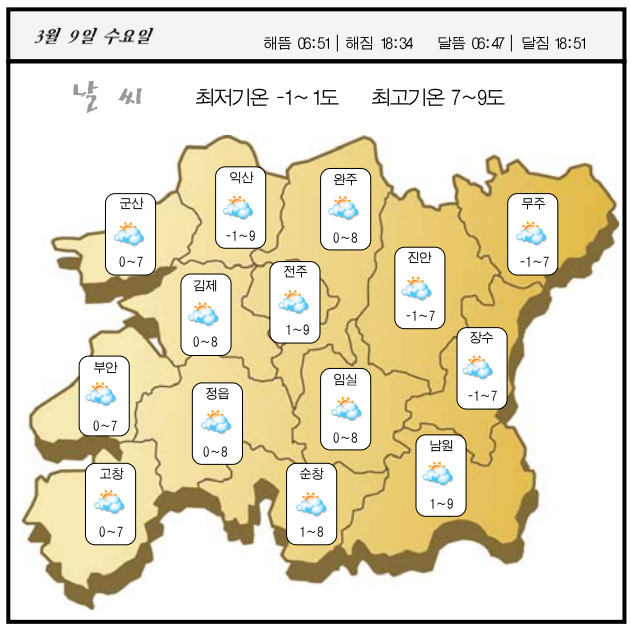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 송하진 도지사는 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0회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장명식 도의원의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규제완화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취업지원센터와 '노인 공익활동사업계획'에 대한 협약서를 교환하고,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 동안 노인 공공시설봉사(행복녹색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어르신을 통한 도시공원 환경관리 추진으로 공원관리를 둘러싼 문제 해소와 동시에 노인일자리 제공은 물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원관리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공원의 환경정비와 수목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에 대한 다면 평가를 분석, 실효성이 확인되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대한노인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교육부, 교육감 고발 철회를"

전북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요구도

전교조전북지부가 교육부의 교육감들에 대한 '물지마 식' 고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전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물지마 '고발 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및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지난 3일 교육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감을 '한국사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고발했다"면서 "교육부의 이번 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죄로 일컫는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로 막가파식 조폭과 다름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고발하는 '고발 교육부', '아니면 말고'의 막가파식 치졸함을 벗어나 교육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교육부로 탈바꿈하길 바란다"면서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후속조치 및 14개 시도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는 것만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끼를 펼칠 수 있는 교육',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산불방지 중점 대책' 추진

20일~4월20일까지 예방 총력

전북도가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를 맞아 산불재난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16년 봄철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고 오는 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산불방지 중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실제 도내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을 보면 봄철에 199건으로 88%에 달하고 가을철이 26건으로 12%에 달해 봄철이 산불 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발생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47%), 논밭두렁 소각(19%), 쓰레기 소각(16%), 기타(18%) 등이다.

이에 도는 도와 14개 시·군을 포함해 서부지방산림청, 전북지방경찰청, 35사단 등 10개의 유관기관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임업후계자협회 등 관련단체 5개 기관이 모여 봄철 산불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임차헬기 3대를 이용해 산불예방 공중 홍보방송 및 산불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기계화진화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80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0명을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감시와 산불발생시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산림에 설치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66대와 산불감시탑 및 감시초소에서 입체적 감시를 실시하고, 동시에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 놓는 행위 등을 3월부터 전면 금지하고, 위반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정영수 기자

도 '가축분뇨 기본계획' 12월까지 수립

수질 · 토양 오염 예방 위해

전북도내 발생된 가축분뇨가 수질, 토양, 지하수 등 환경오염의 심각한 오염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가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 중에 있다.

8일 전북도는 도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라북도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2017~2025)'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의 발생량은 전체 오염원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축분뇨로 인한 BOD부하량은 53%로 적은 양의 가축분뇨가 높은 수준의 오염도를 일으킨다. 이 수치는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의 약 10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도 농업기술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도내 퇴·액비의 연간 소요량은 300만t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간 359.2만여t의 퇴·액비가 과다 살포 혹은 부정처리돼 도의 토양 등의 오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 세워질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에는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에 대한 개요 ▲연도별, 구역별, 축종별 사육현황과 장래 사육두수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현황과 계획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설치계획 등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의회,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을 통해 수립된 계획들은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관계 부서 및 시·군의 가축분뇨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영수 기자

도내 보관 2012년산 쌀 사료 처분

10개 업체에 1만6,512톤 kg당 200원에 판매예정

전북도가 도내 양곡창고에 보관된 2012년 국내산 쌀에 대해 사료용 판매를 시작했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료용 쌀 공급은 도내 10개 업체에 16,512톤이 판매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묵은쌀은 현미 가공절차를 통해 사료업체에 kg당 200원에 판매된다. 정부양곡의 사료용 공급은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공급대상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 등록 및 사료용 쌀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지난 2월23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배정물량은 시장점유율, 사료용 쌀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사료관련 협회별(한국사료협회, 농협사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정했고, 각 협회별 배정물량은 업체의 희망물량에 따라 배정이 이뤄졌다.

사료용 쌀 사용업체에서는 제조공장 소재지 시·군에 월별 사용량을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현미로 가공해 업체에 판매하게 된다.

우리 도에는 올 상반기 9,871톤이 판매될 예정이며 3월에 2,491톤이 공급된다.

/정영수 기자